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위기의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채 언

(연구실장, 전남대 교수)

우리는 올해로 4월혁명 37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그때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해결된 과제가 이제는 누적될 대로 누적되어 커다란 무게로 오늘의 한국경제를 괴물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소생하려면 먼저 이 괴물 같은 것부터 처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젠 어림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오신 많은 분들 앞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이른바 위기적 현실의 정체를 곱씹으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새삼스럽게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부진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외국 채무에 대해 이자조차 못 갚아 단기성 자금을 들여 왔었는데 빚으로 이자를 갚는 이 악순환이 이제는 그 빚의 이자조차도 또 다른 빚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상태에까지 다다른 때문입니다. 현재 1000억 불 이상에 이른 전체 외채 가운데 단기성 외채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계속 누적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이 바로 그 징후입니다. 이런 상태가 만약 더 이상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일 때는 외국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단기성 자금조차 대여해 주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외 채무에 대해 이자 지불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때 가서야 외국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대출 계속을 조건으로 정부의 긴축정책, 공공요금 인상, 임금 및 물가의 동결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그렇게 해서 절약한 상품을 헐값에라도 수출하도록 종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0년대 초에 많은 나라들에서 그 때문에 현지 정부기관과 IMF, World Bank(이 두 기관이 채권은행들을 대표하여 내핍 프로그램을 강제하니까)를 비난하는 폭동과 데모, 스트라이크 등이 빈발하여 역효과가 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태에까지 이르기도 전에 국제금융기관의 대리인 격인 IMF와 World Bank가 미리 개입하여 계속 대출을 받으려면 모종의 조치를 단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에 대해 이른바 ‘구조조정’시켜 세계화, 개방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처음 이를 제시한 당시의 미국 재무장관인 James Baker의 이름을 따서 Baker안이라고도 부릅니다. Baker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만 보면, 첫째 공기업의 민영화, 둘째 작은 정부의 실현,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입니다. 그 외에 자본금융시장을 자유화할 것, 각종 정부규제를 혁파할 것,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기관의 연구소나 민간 연구기관의 많은 박사급 어용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앵무새처럼 이 Baker안을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제시하면서 한국경제가 현재 위기이므로 이런 구조조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Baker안의 허구성과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작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밝혀 보려 합니다.

우선 공기업의 민영화부터 검토해 봅시다. 저들은 “공기업에는 주인이 없다, 회사에 대해 내 것이라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물자를 아끼지 않고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사업이 항상 부실하다. 이를 민영화시키면 내 것이라 주장할 주인이 생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낭비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되더라도 실제 주인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이고 정작 경영은 다른 전문적인 사람에게 위탁시킵니다. 현재의 공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케 하면서 특별히 정치적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는 전문경영인에게 위탁시킨다면 주식회사 형태보다 더 강한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대개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공공요금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 회사가 손실을 보면 국민이 그것을 부담하고 이익을 올려도 국민이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이를 민영화하면 그 회사가 손실을 보아 망할 지경이 되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그 기업을 떠맡아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몇몇 대주주들만 혜택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정말로 주인이 없어서 영업실적이 저조해 왔고 경영이 부실하였다면 민영화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상장하여도 누구 하나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익을 올린 후에야 민영화시켜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민영화시키고 장사가 안 되면 공기업화시키는 것이 영국에서의 국영철도, 전기, 전화회사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강조되는가? 증권시장이 외국자본에 대해 개방되어 있으므로 외국 금융기관들은 자기네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실채권을 민영화된 국가 기간산업의 주식으로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민영화시키니까 같은 가격에도 서비스는 공기업일 때보다 더 나아진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독점기업으로서의 이점을 그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이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으나 공기업은 임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기업도 아무 과실 없는 근로자를 마구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기업에서야말로 임금동결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의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이 나라의 이른바 엘리트들이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국민의 재산을 횡령한 범죄행위였습니다.

둘째로 작은 정부의 실현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위생 또는 교육을 위한 지출을 삭감하고 빈민구호를 위한 활동, 장애자를 위한 활동, 식수·전기·주택·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정부예산의 사용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는 정작 무엇이 남겠는가? 모든 것을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이긴 자들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야경꾼 같은 역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단 국내에서의 경쟁에 이긴 부자들만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남습니다. 여기에다 군사비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것을 보면 아무리 작은 정부라도 군사력만은 크게 늘려야 한다는 요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라면 꼭 존재할 이유라도 있느냐고 되물으면 이들은 재빨리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없을수록 좋습니다”고. 그러면 ‘경찰의 역할이나 국방은 누가 맡습니까?’ 하고 물으면, “개인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국방이나 경찰 업무도 따지고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대신 직접 혜택을 받는 바로 그들한테서만 수수료를 받고 경찰이나 국방의 역할을 대행해 줄 회사를 만들면 됩니다”고 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어찌 되는가? 부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가, 시장 원칙에도 위배되는 고용관행 임금체불 등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고, 고질병에 걸린 부자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백주의 노상에서 아녀자를 납치하여도, 보다 튼튼한 콩팥이나 간을 이식받기 위해 가난한 젊은이들을 납치, 유괴하여도 어쩔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끼리 독자적인 경찰과 군대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간의 군사적 충돌도 자연스럽게 자주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야만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들을 야만인들로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작은 정부는 인간의 도덕적 감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것이고, 부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 인격적 동질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 강조합니다. 또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주장할 때에도 국방에 필요한 산업, 이를테면 식량이나 식수 등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제외시키고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보호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규제의 혁파’도 바로 위의 ‘작은 정부’란 논리 위에서 나온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제일주의적 중상주의적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도 유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외국자본과 금융, 무역을 개방하면서 터져나온 소리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흡사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는 선전 나팔수의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장을 세운다면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나 생산적인 장사보다는 투기만 일삼다가 불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훌쩍 떠나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달갑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들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고비용 가운데 하나가 경직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평생 보장되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잘못이고 능력이나 효율 성과는 무관하게 봉급이 지급되는 연공서열제 등이 문제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잘못이라는 것을 근로자들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반봉건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관행에도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마땅히 근대적 사회혁명을 통해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이 사회가 아직 노동시장에서만 봉건적 잔재를 지니고 있습니까? 봉건적 잔재는 토지시장, 금융시장, 정부조직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왕 노동시장을 현대화, 유연화시키려면 먼저 토지시장과 금융시장, 정부조직까지도 현대화, 유연화시켜야 옳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 전반을 현대화, 과학화시켜야 합니다.

정경유착으로 표현되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길드적 인맥조직, 각종 종교단체들의 비밀스런 담합,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기관에 뿌리박은 봉건적 잔재들, 법조계,

의료계 등 전문지식을 내세운 온갖 선비 사(士)자 스승 사(師)자 붙은 집단들의 길드 조직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금껏 짓누르고 있는 저 괴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의 정체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임금수준만 낮아진다고 향상될 수는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투자, 연구개발투자를 등한히 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만만한 것이 근로자들이니까 그 주된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만 돌립니다. 자신들의 문제점은 반성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탓해서는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들은 이미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연공서열제가 작업현장에서는 먹혀들 수 없다거나 늙어서까지 평생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해고를 당해도, 봉급이 깎여도 별 소리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길드조직을 비판하고 과학적 재편성을 요구할 명분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몸소 그 현대화로 인한 고통을 말없이 체험한 이들 현장 근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주체가 된 자유로운 경쟁적 시장구조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사회의 길드 조직이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지 살펴 봅시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기술투자, 연구개발의 부진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투자, 연구개발투자의 부진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기업의 전체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이 10%도 안 되는 재벌그룹이 다섯이나 되고 30대 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의 평균이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 비율이 30%를 넘고 대만은 50% 이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그 이익금의 대부분을 이자 지불에 써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평균적으로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금리비용으로 5원 내지 6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1.7원 내지 2.5원, 일본도 1.6원 내지 2.5원, 독일은 0.8원 내지 1.1원 정도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나라에는 ‘썩기’라는 독특한 금융관행 때문에 금리 부담은 배가됩니다. 즉 10원 내지 12원이 금융비용으로 지불되는데 이는 인건비 비중과 맞먹거나 그 이상입니다. 왜 이런가? 회사 사장

이 자기한테 돈이 있어도 회사에 직접 자본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회사에 자기가 사채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을 우회하여 대부를 하면 회사가 망해도 자기가 투자한 돈만은 확실히 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표 1> 주요그룹부채비율 (단위 10억원, %, 1995)

순위	그룹별	자본총액	부채총액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	삼미	74	2,401	3,244.5	2.99
2	한라	174	4,611	2,650.0	3.64
3	진로	133	3,198	2,404.5	3.99
4	한일	207	1,938	936.3	9.65
5	뉴코아	192	1,774	924.0	9.77
6	한보	680	4,486	659.9	13.16
7	한화	1660	10,872	642.9	13.46
8	한진	2007	12,782	636.9	13.57
9	두산	797	4,981	625.2	13.79
10	동부	662	3,876	584.9	14.60
30대 평균				336.9	20.54

만들어 팔아도 항상 회사에는 돈이 없습니다. 새로 투자하려면 다시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더구나 기술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그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종류의 투자는 만약의 실패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빚내어 할 순 없습니다. 당장 이자부터 갚아 나가려면 당장 생산에 쓰이는 투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이나 연구를 위한 투자는 회사 자체의 내부 유보된 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거나 낮은 이자로 장기간 거치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주지 않는 한 선불리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높다고만 탓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허리끈을 아무리 졸라매어도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 대로 금리수준만 같이 올라가서 금융비용도 아울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엔 여전히 돈이 남지 않습니다. 허리끈을 졸라맨다는 것은 결국 엉뚱한 자들만 배불리게 만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표 2>)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금융이 아직 근대화되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은행이 기업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꺾기 또는 부동산 같은 담보물을 조건으로 대부를 하는 한마디로 전당포의 고리대금업 같습니다. 아무리 독자적 기술을 가

<표 2> 기업금융부담 국제비교 (%)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94	1995	1994	1994	1994
자기자본비율	24.8	25.9	37.5	32.3	53.4
차입금의존도	44.5	44.8	37.5	32.3	53.4
차입금 평균이자율	11.4	11.7		4.3	6.2
총자본 회전을	0.97	1.0		1.05	0.89
금융비용/매출액	5.6	5.6		1.6	1.7

진 장래성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물이 부족하면 외면당합니다. 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거나 경영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어용 연구기관의 학자들은 이것을 정부가 금융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 자율화시키면 은행이 전당포 같은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재원이 대부분 정부로부터의 대출자금 아니면 지하에 숨은 사채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떼면 은행은 완전히 사채꾼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영국에도 한때는 금융이 전당포 같았습니다. 그것이 근대적 금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바로 전근대적 금융업에 대항하여 쫓겨난 부르주아 시민들의 조직적 항거, 바로 시민혁명 덕택입니다. 산업 자본가들끼리 전당포 업자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신용조합을 결성, 자기네들끼리 여유 자금을 상호 융통해 주면서 근대적 은행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 하나만으로도 사업성만 있으면 대부를 하여 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들이 집을 산다 할 때 친척들이 장래 소득원이 확실하기만 하면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은행제도를 왜 발전시킬 수 없는가? 산업자본가들이 주체적으로 은행을 발전시킬 만큼 자본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기술과 신용을 갖고도 금융능력이 없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발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국가가 주도하여 전당포 중심의 금융을 몰락시키고 근대적 은행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반봉건적 요소들이 오히려 해방 이후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제도금융이 지하 사채금융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박정희가 쿠데타 초기에 놓여준 고리채를 정리한 것은 진일보된 측면은 있었지만 일본 명치유신을 흉내만 내었고 내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금융기관은 정상배들과 부패한 퇴직 공무원들, 종교단체들이 자기네의 검은 돈을 지하 사채시장에 유통시키면서 세탁하는 창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방 이후의 누적된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산할 주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 돈이 없어 자녀를 병원이나 학교에 못 보내어도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도적질할 줄 모르며 착하게 살아 온 바로 민초들만이 그 적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빨갱이 같은 소리이나? 민초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지구상에는 일국 사회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민초들이 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로는 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국사회주의를 민초들이라 해서 무식하다고 함부로 꿈꾼다고 단정지를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먼저 사회주의화되면 그때는 민초들도 한국의 사회주의화를 꿈꿀 수 있겠지요.

현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 교육기관에도 양심적으로 살아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조직 속에 매몰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소신껏 일을 처리하다 축출당하고만 있습니다. 민초들이 일어서면 이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자유경쟁시장의 원리, 자본주의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실현시켜 보려면 근로자들 외엔 달리 주체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도 있는가? 현재의 조건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을 동원하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가 바로 근로자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확실하게 그 기술개발의 과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형식이어도 좋겠고 근로자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감시, 감독하는 형식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주인의식을 갖게만 한다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반봉건적 요소들은 금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문제도 그 중의 주요한 하나입니다. 주요국의 공단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부산이나 광주 등지는 평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영국의 윈야드 공단지대는 평당 5천 원, 미국 오스틴 지역은 평당 1만 6천 원, 싱가포르 공단 지역은 평당 1천 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국토 전역이 독점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투기적 토지가격은 임대료를 높이고 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토지가격이 높으면 산업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비용부담도 늘어나 도시지역 공립학교가 줄어들고 도로가 협소해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매출액의 17% 이상이 물류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금융비용, 인건비의 비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로 저 부패한 퇴직 공무원들, 정상배들, 기술보다는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사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들, 각종 종교단체, 소위 선비 사(士)자, 스승 사(師)자를 가진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의 전문지식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인격으로, 인간성으로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경제구조가 재산형성의 저축 수단으로 토지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경우엔 토지 소유권이 99년간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엔 국가에 귀속됩니다. 소유권 자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강화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날 도입된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관료들이 그 시행세칙을 손질하면서 저들끼리 빠져나갈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은 돈이 지금은 해외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IMF에서 권유하는 구조조정 정책 가운데 금융의 자유화와 함께 국내 한국인들이 외화소지를 자유롭게 할 것, 국외로 여행할 때 외화반출을 자유롭게 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달러 예금을 한국으로부터 국제금융기관이 예치하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1991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Morgan Guaranty라는 금융기관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제3세계의 대외부채 총액이 1조 3500억 불 가량인 데 비하여 제3세계 민간인들(제3세계의 은행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이 미국이나 스위스 등지에 예금한 외화가 드러난 기록만으로도 6000억 불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익명으로 예금된 검은 돈까지 합하면 훨씬 더 될 것입니다. 제3세계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검은 돈을 몰래 해외은행에 예치시킨 후 다시 자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부토록 조치하여 돈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외화유출은 한국에서도 이미 제5공화국 이후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제6공화국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는 일반 부유층들마저도 탈세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존중합니다. 시장가격은 바로 이 이기심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경제의 위기를 운운하며 근로자만 애국심을 발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면 이는 시장의 경쟁원칙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조실록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함락한 사람들은 왜구들이 아니라 바로 동래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국가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거나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들만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에게 실직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것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라리 지금 해외부채에 대해 이 자지급 불능을 선언하면 근로자들에게겐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가운데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우리 정부에 강요하여 억지로 떠맡긴 프로젝트들 때문에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율곡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채무들입니다. 저들 외국기관들이 부패하고 정통성이 결여되었던 한국정부에 대해 그 약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부채들을 안기게 한 것들에 대해 공개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IMF도 1991년부터는 제3세계의 정부하고만 채무이행 스케줄의 조정을 협의하지 않고 노동조합 지도자, 반전단체, 인권단체, 환경 등을 위한 시민단체도 협의에 참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탕감되는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에게겐 오히려 여유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는 정부가 지난날과 같은 부패행위를 자행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탕감된 혜택이 국민의 건강이나, 교육,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엉뚱하게 부유층의 불로소득만 높여주어 과소비와 해외로의 자본도피로 다시 누출된다면 백해무익한 협의가 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 내부의 변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한국의 자칭 엘리트들, 자기네들의 위기이지 근로자들, 농민들의 위기는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4월혁명의 37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함성 속에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에게 삼가 고개 숙이며 우리 다 함께 오늘을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각오를 새로이 합시다.

사월혁명회보 제49호(1997.6)